



국무조정실
국무총리비서실

보도자료



보도일시	2022. 2. 11(금) 15:00 (회의 종료 후) 사용	배포일시	2022. 2. 11(금) 11:00 배포
비고	* 모두말씀 별도배포		
담당부서	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	담당자	기획총괄부장 신양수, 서기관 최두영 (02-2100-2034)

김부겸 국무총리, 제14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주재

“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가 최우선!”

테러 위협 한 발 앞서 제거하고 안정적 대비태세 유지한다

- 「2022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」, 「마리나항 출입국 관리 강화 방안」 심의·의결 등

◆ 「2022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」

√ 국내외 테러 정세 평가 반영 → 테러 위해요소 사전 차단, 대비태세 유지 위한 3개 분야(△선제적 예방활동 △안정적 위기관리 △대테러 역량강화) 9개 중점과제 수립

◆ 「마리나항 출입국 관리 강화 방안」

√ 전국 37개 마리나항만에 요트 출입국, 시설 미비 등으로 출입국 관리상 허점 우려
→ 11개 권역별 출입국 거점 마리나항만 지정·운영, 마리나이용 정보화시스템 구축

◆ 「국외테러 관련 재외국민 보호 및 국제협력 강화」

√ '21년 49개국에서 1,368건의 테러 발생 → 테러정세 악화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
√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효율적인 국경관리 및 대테러체계 유지 → UN 우수사례 선정

◆ 「新유형 해양테러 대응역량 강화 방안」

√ 드론, 무선조종보트 등 첨단기술 활용 테러 우려 → 전술매뉴얼 보완, 교육훈련 강화 등

◆ 「테러대응구조대 추가지정 등 대테러 대응능력 강화」

√ 테러대응구조대 확대 운영(24개대 646명 → 27개대 914명), 화생방 초기 대응역량 등 강화

□ 정부는 2월 11일(금) 오후 2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14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*를 개최했습니다.

* 「테러방지법」 제5조에 의거 구성·운영, 위원(대테러 관계기관의 장 20명)

○ 오늘 회의에는 2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4건의 안건을 보고했습니다.

- 「국내외 테러 정세 평가」를 반영한 「2022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 계획」과 「마리나항 출입국 관리 강화 방안」을 심의·의결하였으며

- 「국외테러 관련 재외국민 보호 및 국제협력 강화대책」, 「新 유형 해양테러 대응역량 강화방안」, 「테러대응구조대 추가 지정 등 대테러 대응능력 강화방안」 등을 마련했습니다.

□ 김 총리는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철저하게 차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절대적 임무라고 강조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대비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

① '22년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(심의·의결)

< 2021년 성과 >

-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피랍되었던 우리국민 5명을 무사 귀환시켰고 국제테러정세 악화시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으며
- 드론테러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드론테러 대응훈련에 주력하는 한편 원전 등 국가중요시설에 드론 탐지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.
- 또한, 에너지시설마리나항 등에 대한 특별점검으로 취약점을 보완하고 생물테러 감염병병원체 등 테러이용수단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속 전개하였습니다.
- 한편, 특공대 합동훈련으로 상황 발생시 통합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전담 조직 장비와 전문분야 대테러인력을 충원, 대응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.
- 화학테러 취약시설 사고예측 DB 구축 등 위해요인 사전 예측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화생방 상황시 대응요원 신체변화를 분석, 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테러 대비태세 과학화에도 주력하였습니다.

< 2022년 정세전망 >

- (국제) '코로나19' 장기화와 아프간 미군 철수 등으로 불안한 테러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극우테러·중오범죄도 우려됩니다.

- (국내) 테러단체들이 온라인 선전을 강화하고 있고 국내체류 외국인들의 테러자금 지원, 조직화 시도가 지속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
 - 서아프리카 기니만 일대에서는 해적들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난이 심화되어 수익성이 높은 선원납치에 집중, 우리 선원 납치사건 재발이 우려되며
 - 코로나19 장기화 및 정치 일정 등으로 정치·사회 불만자들의 돌발적 폭력사태 및 테러 모방범죄 가능성도 우려됩니다.

< 2022년 추진계획 >

- 정부는 테러 위해요소는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안정적 대비태세를 유지하여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유지한다는 대테러활동 목표 아래 9개 중점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.
 - ① 기관별 소관분야에 대한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행적 관리로 국민안전 위협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하겠습니다.
 - ② 외국 정보·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테러 징후를 조기 포착하고 테러위험인물의 입국과 테러자금 모금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.
 - ③ 드론 등을 활용한 신종 테러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드론탐지·차단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겠습니다.
 - ④ 대테러특공대 등 전담조직은 위기상황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.
 - ⑤ 테러정보공유협약체·화생방테러대응협약체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활성화하고 국가 중요행사 안전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 - ⑥ UN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지역 진출 재외국민과 우리 기업에 대한 보호활동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.

- ⑦ 테러자금 거래제한 강화 등 법령 개정과 함께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테러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.
- ⑧ 경찰특공대 추가창설(울산·강원·충북) 및 소방청 화생방 전문인력 충원 등 관계기관 조직·인력을 보강하고 대테러장비도 확충하겠습니다.
- ⑨ 특공대 합동훈련을 통해 대테러전담조직의 실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항만보안시스템 강화방안 등 대테러 정책대안을 발굴하겠습니다.

② 마리나항 출입국 관리 강화 방안 (심의·의결)

- 현재 요트는 전국에 산재한 37개 마리나항만에서 출입국을 하고 있으나 많은 시설이 보안 및 출입국 시설이 미비하여 입국 인원의 무단이탈 등 관리상 허점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.
- 이에 따라, 보안시설이 강화된 11개 권역별 출입국 거점 마리나항만을 지정하여 운영하고, 마리나이용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마리나항 이용자에 대한 원스톱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‘마리나항 출입국 관리강화 방안’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.

③ 국외테러 관련 재외국민 보호 및 국제협력 강화 (보고)

- 작년 한해 49개국에서 1,368건의 테러가 발생하였으나 우리 정부는 해외 아프간 미군 철수 등 테러정세 악화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활동을 통해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습니다.
- 또한, UN에서는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국경을 봉쇄하지 않고 효율적인 국경관리 및 대테러체계를 유지한 우리 정부의 활동을 우수사례로 선정, 모범사례집을 발간하여 유엔 회원국에 배포할 예정입니다.
- 올해도 유엔과의 체계적인 대테러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국제사회의 대테러 역량 강화를 주도하며 국외 테러 피해예방을 위하여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활동도 지속할 예정입니다.

4 新유형 해양테러 대응역량 강화 방안 (보고)

- 해외에서 드론, 무선조종보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해양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러한 첨단 기술이 해양테러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.
- 이에 해양경찰청은 '해양테러 공동대응 협의체'를 구성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복잡, 다변화되는 해양테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무선조종보트 공격 등 새로운 유형의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매뉴얼을 보완하고 교육 훈련을 강화하는 등 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

5 테러대응구조대 추가지정 등 대테러 대응능력 강화 (보고)

- 테러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청은 테러대응구조대를 현재 24개대 646명에서 27개대 914명으로 확대 운영키로 하였습니다.
- 또한, 화생방 전문가를 확대 채용하여 화생방 초기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현장대응 중심의 전문 교육훈련과 장비 확충을 통해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